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7. 21. Vol. 29

■ 농정이슈

정부,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결정

■ 정책브리핑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추진

■ 연구지원

201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정부,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결정〉

- [정부, 쌀 시장 개방 공식 선언, 7.18일] 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 쌀 산업 미래 위해 2015.1.1일부터 전면 개방,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농가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 강구
 -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두 차례(10년씩) 걸쳐 관세화 유예, 국민 주식인 쌀의 상징성과 쌀 생산농가, 국민여론 등 감안한 조치
 - (쌀 개방 불가피한 이유) 관세화 유예 대가로 감당해야 할 쌀 의무수입물량 확대*가 농가에 더 큰 부담, 고관세를 부과한 시장 개방으로 쌀 산업 보호
 - ※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 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 [최대한 고관세를 확보·유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쌀 산업 보호 위해 가능한 한 최대치 확보할 계획
 -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총연맹 각각 최소 400% 이상, 500%대 고율 관세 부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치의 관세를 도출해 제시
 - (관세율 공개 시기) WTO에 정부안 통보할 때 공개, 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지 않을 것
 - (관세율 변동 가능성 여부) 현재 추진 중예정인 FTA·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 지속적으로 보호하는데 총력
 - ※ (농민단체) 수입쌀에 고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 등으로 관세를 하락 혹은 폐지될 가능성 제기
- [쌀산업발전 대책방향]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우량농지 이용 효율화, 소비·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육성), △농가소득확대(소득안정장치 보완, 이모작 확대), △국산쌀 경쟁력 강화(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 포함
 - (세부계획) 추후 국회·농업계 의견 수렴해 세부 내용 확정할 계획
- [향후일정]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양허표 수정안 WTO에 통보,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완료할 방침
 - ※ 관세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 거쳐 국회·농업계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

자료 : KBS·YTN(2014.7.17.) / KBS·MBC·MBN·SBS·YTN·한국경제TV·경향신문·국민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2014.7.18.) / NEWSis·데일리안·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4.7.19.)

참고 :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부터 쌀 관세화하기로 결정 - 관세화 이후 쌀산업의 체질 개선 및 농가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 강구 -」(2014.7.18.)

한·중 FTA 제12차 협상 개최 결과

- **[한중 FTA 제12차 협상 개최, 7.14~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 (한국)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참석
 - ※ (중국) 왕서위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참석
- **[논의내용]** 양측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 특히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 서비스/투자분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 도출
 - **(상품분야)** 중국 -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한국 -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 교환, 의견차 좁히기 위해 노력
 - **(서비스분야*)** 협정 발효 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기로 합의
 - ※ 그동안 (한국)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 (중국)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 주장
 - **(투자분야*)** 협정 발효 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 채택,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 작성하기로 합의
 - ※ 그동안 (한국) 투자 자유화 요소 반영, (중국)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
 - ※ 후속협상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
 - **(규범/협력분야)** 경쟁, 전자상거래 챗터 협정문 완전 합의, 환경 챗터 실질 진전
 -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분야)** 유의미한 진전
- **[향후일정]** 제13차 협상 9월경 중국에서 개최, 구체적 일정 및 장소 추후 협의

자료 : SBS·YTN·한국경제TV(2014.7.18.) / 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2014.7.19.)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제1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2014.7.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중 FTA 농어업보호 촉구 결의안 채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7.15일]**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정부에 요구한 결의안 주요내용〉

- 한중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분석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의 관철
 - 한중 FTA 협정문 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 제외
 - 자유화를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 중국 불법어업 문제 해결
- **(배경)** 현재 한국 농어업은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 못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에 대해 우려** 제기
 - ※ UR, 한·미, 한·EU FTA 등
 - **(필요성)**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 강요해선 안 되며,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보다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회생이 절실**

자료 : SBS(2014.7.15.) / NEWSis·식품저널·아시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4.7.16.)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7.18.)

제1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 **[제1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7.14~1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위해 서울에서 개최
 - ※ (한국)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참석
 - ※ (아세안) Wong Toon Joon(싱가포르 국장, Principal Trade Specialist)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참석
- **(제1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산하위원회 개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19차), 투자작업반(제2차), 경제협력작업반(제16차)
- **(논의내용)**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 주요 논의
 - ※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07.6월), 서비스협정('09.5월), 투자협정('09.9월) 발효, 이행 관련 회의 정기적으로 개최 중

자료 : 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아투데이·조선일보(2014.7.14.)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제1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2014.7.14.)

농정이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 [정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예정, 12.11~12일]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ASEAN 10개국 정상 및 ASEAN 사무총장 초청해 부산에서 개최

※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급속도 발전, 오늘날 ASEAN은 우리의 제2의 교역 상대방이자 투자 대상지로서 명실 공히 우리 외교의 주요 축으로 부상, '15년 ASEAN 공동체 출범 시 인구 6억, GDP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목적) 한국-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도모, 2013.10월 한-ASEAN 정상회의의 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 구현

- (의의) 현 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가장 중요한 외교행사

- (개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총 655억 원(생산 465 + 부가가치 190) 추정

※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분석 결과(7.15일)

자료 : KBS·SBS·YTN·문화일보(2014.7.15.) / 경향신문·국민일보·news1·뉴스와이어·NEWSis·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4.7.16.) / 농민신문(2014.7.18.)

참고 : 청와대 뉴스_「2014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2014.7.15.)

제24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제24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7.14일] FTA 추진동향 및 전망, 농업수산 분야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 논의, FTA 추진 이래 최초로 평가한 한·칠레 이행상황 평가내용 점검

※ (기준) “FTA 국내대책위원회” → (변경)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명칭 변경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시행, '14.3.24), (심의범위) 자유무역협정(FTA) → 통상조약 전반에 대한 국내대책으로 확대·개편된 후로 처음 개최

※ (참여자) 정부위원 18명<당연직> / 민간위원 16명<위촉직>

- (산업통상자원부) FTA 추진동향 및 전망 보고, ‘新통상 로드맵’에 따라 아태 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실리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 등 총 7건의 FTA 협상 동시 추진 중임을 보고

※ (양자)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인니 / (다자) RCEP, 한·중·일 / (기체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농업분야수산분야에 대한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 각각 보고

농정이슈

※ 국내대책 수립·평가 통해 미흡한 분야는 보완, 신규 사업 발굴, 향후 투·융자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 제고

자료 : SBS·한국경제TV(2014.7.14.) / 머니투데이·서울신문·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조선일보(2014.7.15.) / 농민신문(2014.7.16.)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제24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농업·수산 분야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 논의 등 -」(2014.7.14.)

정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7.15일] 한반도 평화통일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0명 위원**으로 발족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토대로 한 평화통일 구상한 ‘드레스덴 연설’을 한지 4개월 만

※※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 민간위원 30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 (구성)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4개 분과위 구성, 분야별 과제를 맡아 실질적 성과 도출

- (운영방안) 정부-민간위원 간 협력해 통일한국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투명성 있게 통일 논의 진행

※ 8월 초 첫 회의 개최 예정

자료 : KBS(2014.7.14.) / MBC·TV조선·YTN·세계일보·서울경제(2014.7.15.) / 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2014.7.16.) / 농민신문(2014.7.18.)

참고 : 청와대 브리핑_「통일준비위원회 인적구성 및 운영방안 발표」(2014.7.15.)

정부, 민간단체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 [농업·축산·보건분야 대북지원(30억 원)*] 통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 (공고) 민간단체가 각 분야별로 계획서 제출·심의 거쳐 단체별 통보 / (사업기간) 최종 선정 시로부터 1년

지원대상 사업

지원사업	지원규모*	주요내용
• 진료소 지원사업	10억 원	• 영유아 등 질병 치료·예방을 위한 물품기술 지원
• 온실 지원사업	10억 원	• 북한 주민 대상 온실(채소 등) 물품기술 지원
• 낙농 지원사업	10억 원	• 영유아 등 영양 개선을 위한 낙농(산양 등) 물품기술 등 지원

※ 각 부문 중복 지원 가능, 부문 당 복수 단체 선정

☞ 농정이슈

- (5.24 조치 이후 첫 대북 민간단체 지원)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정부 예산으로 대북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이번이 처음

- [정부입장] 모든 부문에 정부지원이 풀린 것은 아니며, 연초부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 지원 아이টে를 확대하겠다고 표명한 데 따른 조치

자료 : KBSMBCSBS·YTN(2014.7.15.) / 경향신문news1·NEWSis·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2014.7.16.)

참고 : 통일부 공고_「2014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2014.7.15.)

☐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로 농축산물 무역적자 심화 전망

- [원·위안화 직거래* 통해 교역 증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교역 여건 고려할 때 원·위안화 직거래가 양국 간 교역 증진 기여 전망

※ 한·중 정상회담(7.3일) 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구축 합의,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비용 절감, 환리스크 회피 등 이점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효율성 높아져 양국 간 교역량 증가 예상

- [농업부문 적자 확대 우려] 농축산물의 경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교역규모가 증가할수록 무역 적자폭 확대되는 불균형구조 심화 예상

- (주요내용) △비용구조 개선 효과가 대중국 수출보다 수입에서 나타날 가능성, △금융접근성 높아져 농식품 부문에서 양국 간 기업진출 활발해져 시장 경쟁구조 변화 초래, △중국의 저환율 정책 지속된다면 수출채산성 악화 불가피

- [대응방안]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면 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자료 : 아주경제·헤럴드경제(2014.7.15.) / 문화일보(2014.7.17.)

참고 : 농협경제연구소 NHERI 주간 브리프_「원·위안화 직거래가 농산물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2014.7.14.)

<정부,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 첫 회의 개최>

- [정부,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구성·회의 개최, 7.11일]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한·중 정상회담(7.3일)에서 합의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 이행 위해 본격적인 업무 착수

※ i) 한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중국 내 직거래시장 개설 위한 여건 조성, ii)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iii) 800억 위안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획득, iv) 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 v)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 농정이슈

- (구성) 무역결제 활성화, 위안화 금융 활성화, 자문그룹 세 개 작업반 구성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당국, 금융기관 참여

- (운영방향)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집중,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금융거래 확대 통해 한국 금융시장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 마련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별도의 TF 설치·운영] 7.9일 첫 회의 개최, 거래 및 결제시스템 등 시장 개설을 위한 필요 준비사항 논의

- [향후계획]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 운영 개시, RQFII 획득,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합의사항 조속한 가시화 노력

자료 : MBN·SBS·한국경제TV(2014.7.11.) / 뉴스토마토·NEWSis·매일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데일리(2014.7.12.)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2014.7.11.)

☐ 소득수준 높은 계층일수록 수입 체리·망고 선호

- [수입과일 구매행태 조사* 결과] 수입 체리 구매한 경험, 소득 높을수록 많이 구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소비자패널 1,000명 대상 설문에서 593명 응답한 결과

- [2014년 상반기 수입과일 구매경험 있는 소비자] 전체 93% 차지

- (과일별 비중) 바나나 23% > 오렌지포도 각각 16% > 체리13% > 키위 11% > 망고 9%

- [체리 구매자 소득분포별]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34.9% >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31.5% > 300~400 19.7% > 200~300 8.1% > 200만 원 미만 5.7% 순

- (원인) 미국 등 해외 거주 하면서 체리 맛본 적 있는 고소득 계층에서 FTA 등으로 체리의 수입가격 낮아지자 대거 구매

- [체리·망고 국내 과일 대체효과 커] 소득 높을수록 수입과일 선호도 상승함에 따라 대체효과로 국내 과수 농가에 타격 우려

- (체리) 포도 대신 체리 구입 비중 52% > 토마토 11% > 귤 9% 순

- (망고) 복숭아 대신 망고 구입 비중 38% > 참외 22% > 감귤 12% 순

자료 : 경향신문·농수축산신문·연합신문·한국농어민신문·헤럴드경제(2014.7.15.)

□ 동반성장위원회, 김블랙박스 등 5개 품목 적합업종 해제

- **[5개 품목 자동 해제 전망]**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대상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받은 결과(7.11일), 중소기업 보호 위한 적합업종 품목에서 김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 품목* 자동 해제 전망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하지 않은 품목
- **(중소기업에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품목) 77개**(순대, 떡, 두부, 김치, 어묵 등)
 - ※ 2014년 하반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 완료되는 82개 품목 중 77개
-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 신청 품목) 50개**(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해제 신청 현황 ■

지원사업	주요내용
• 재합의 신청	• (77개 품목) 발광다이오드(LED) 등, 순대, 떡, 두부 등
• 재합의 포기	• (5개 품목) 차량용 블랙박스, 김,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낙뢰 방지 시스템
• 해 제 신 청	• (50개 품목) LED 등, 어묵, 단무지, 맞춤양복, 세탁비누, 레미콘 등

- **[철차진행]** 재신청 품목 대상으로 7월 하순부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합의 유도,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협의체 구성해 협상 착수
 - ※ 중소기업-대기업 간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놓고 갈등 예상
- **[중소기업, 대기업 50개 적합업종 품목 해제 신청한 데 대해 강력 반발]** 중소기업 중앙회,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 채택 (7.16일), 동반성장위원회 전달
 - ※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의 참여, △적합업종 품목의 해제 사유 제시, △동반위의 해제신청 단체 신청적격성 검토 결과 공개, △책임있는 적합업종 제도 추진, △중소기업계와 시민, 사회단체 연대
- **[농협, ‘두부 중소기업적합품목 지정 해제 요청서’ 제출, 7.9일]** 콩 재배농가 입장 대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
 - (대기업, 콩 재배농가, 정부) 국산콩 구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량은 증가, 콩 가격도 중소기업적합품목 지정 이후 폭락
 - (중소기업) 전체 두부 시장의 70% 이상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 적합품목 통한 규제 반드시 필요

자료 : MBNSBS(2014.7.11.) / 경향신문뉴스토마토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서울파이낸스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조선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4.7.12.) / 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2014.7.15.) / 아주경제(2014.7.16.) / 머니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2014.7.17.) / 한국농어민신문(2014.7.18.)

□ 포장 수입쌀 재포장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 **[윤영희 의원 등 의원 13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7.11일]** 양곡 유통의 투명성 확보,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하고자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 재포장 금지하는 조항 신설**
 - ※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 포장해 유통시키는 사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
- **(개정안)** 양곡가공업자,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에 대해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현미 형태로 수입된 쌀은 제외**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부과

자료 : 식품저널(2014.7.12.) / 식품음료신문푸드투데이(2014.7.15.) / 한겨레(2014.7.16.)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7.18.)

□ 산림청,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

-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 7.10일]** 산림청, 재해 복구비(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지원 기준 확정
 - **(지원 기준액 저조한 한계점 개선)** 현실 단가 미흡, 농작물과 비교해 지원 기준액 낮았지만 일부 품목과 산림시설의 산정 기준액 인상돼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 다소 해결
 - ※ (산정기준)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 위해 지자체·생산자단체의 지원 받아 생산원가와 시장 실거래가격 반영
 - **(5개 품목 산림작물 인상, 평균 54%↑)** △다래(2,550천 원/ha → 6,180, 142%), 산양삼(8,080 → 11,190, 39%), △머루(5,420 → 7,400, 37%), △약초류(2,660 → 3,400, 28%), △약용류(7,160 → 8,760, 22%)
 - **(대추 비가림시설 5종 산림시설, 평균 42%↑)** 자연재해 피해 입은 대추재배 임가에게 일반형 66,050천 원/ha, 수동개량형 68,270, 자동연동형 88,990, 수동우산형 97,380, 자동우산형 101,620 지원금 지급
- **[향후계획] 모든 지원품목 복구비용 기준액 현실화, 임업소득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임업분야 투자 활성화** 되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소방방재청)와 협의 지속

자료 : news1뉴스와이어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파이낸셜투데이(2014.7.11.) / 농수축산신문(2014.7.14.)

참고 : 산림청 보도자료_「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 확정 - 복구비용 산정 기준액 현실화로 임업소득의 안정망 구축 -」(2014.7.10.)

정책브리핑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7.15.)

□ 개요

- [농식품부,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기본원칙) 생산자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홍보 및 제도개선 등 기반 뒷받침에 주력
 - ※ 시범 추진 후 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 여부 결정
 - (사업목표) 단기적 - 사과 출하규격 5, 10kg 개편 / 중장기적 - 추가 소포장화 지속
 - ※ '15.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유통 제한이 우선 목표

□ 주요내용

- [추진방법] 관련 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10kg 등 소포장 제값 거래 유도 중점 추진
 - ※ (산지) 선별 철저, (도매시장) 소포장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장려
- [추진계획] 시범기간 중 15kg 제작 중단, 시행시기 등에 대한 홍보 중점 추진, 필요 시 표준규격 개선
- [추진체계]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 구성, 기관별 역할 분담 하에 추진하되, 수시 실무협의회 통해 추진상황 점검

소포장유통협의회 기관	추진 역할
• 농식품부	• 표준규격 개선 등 제도개선, 홍보
• 사도 등 지자체	• 15kg 포장재 미 지원, 농업인 및 도매시장 대상 홍보
• 한국사과연합회(과수농협연합회)	• 농업인, 법인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 ※ 15kg 상자 제작 중단, 10kg 상자 선별 철저 등
• 농협중앙회	• 전문지, 사과데이, 과일대전 통한 홍보 ※ 과실적립금 활용하여 추진
• 과실중도매인연합회	• 10kg 상자 소포장 우대
• 도매시장법인협회	• 10kg 소포장 경매, 정가수의매매 장려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공영도매시장 홍보
• 한국배연합회	• 15kg 대체 상자규격 연구, 의견수렴

- [추진일정] 금년산 사과가 출하되는 2014.8.1일부터 시범 추진, 평가 거쳐 2015.8.1일부터 본격 시행 여부 검토
 - (도매시장) 15kg 상자보다는 10kg 소포장 중심의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추진
 - (산지) 10kg 소포장 우선 사용 및 차별화로 속박이 근절 추진, 아울러, 지자체에서 15kg 포장재 지원 중단
 - ※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재고 소진 위해 병행 사용 불가피
- [교육 및 홍보] 사과 소포장 일정, 15kg 상자 제작 중단 등 사전 당부사항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라 집중 홍보
 - (농협, 사과연합회) 전문지, 사과데이 및 과일대전, 교육 통해 산지(농업인, 법인) 대상으로 홍보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중간유통인(공영도매시장) 대상으로 홍보 추진
 -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연합회도 관련 조직 계통 통한 홍보 강화
- [제도 개선] 시범사업 결과 감안, 필요 시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를 제외하여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 사과 표준규격 개선('14.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 [기대효과] 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간 유통인 비용 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 창출, 도매시장 활성화 통한 유통구조 개선

〈과실 소포장 효과〉

- (소비자 이익) 운반 및 저장 편의성, 고품질의 신선도 높은 과실 소비로 만족도 제고, 재포장 비용 축소에 따른 지출 감소
- (생산자 이익) 국내산 과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과실 소비 확대, 농가수취가격 향상
- (중간유통인) 재포장 비용 절감, 속박이 및 신선도 하락 방지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7.14일)

- **[목적]**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 완화**

□ 주요내용

- **[감면물품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 (개정 전) 외국물품 세관에 수입신고 시 세관 직접 방문하여 종이서류 제출 → (개정 후) 세관방문과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전산으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하는 방법(전자적 서류제출)으로 면세

〈세관에 외국물품 수입신고 방법〉

- **(P/L 신고)**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세관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법
※ P/L: PAPERLESS의 약자로 첨부 서류 없이 신고한다는 의미
- **(서류제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
 - 전자서류 제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방법
 - 종이서류 제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종이서류로 출력하여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

- **[감면대상 물품]**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 보정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가능

- **[최고기 수입의 경우]** (개정 전) 각 부위별(양지, 등심, 갈비 등)로 신고 → **(개정 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전체로 한 번에 신고 허용**, 신고 편의 제고
 -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개정 전)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 서류를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 → (개정 후)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 가능
- **[분석검사 실시한 경우*]**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세액정정 등에 즉시 활용 가능
※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

-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인증 기준 완화]**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인증 기준 완화(AA이상 → A이상)
- **[항후계획]**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정비 지속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 감면대상 물품 ■

감면대상 물품	주요내용
• 해외임가공 감세물품	•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중국 등 외국으로 수출하여 동 물품으로 외국에서 완제품 제조 후 재수입 시 당초 우리나라에서 보낸 원부자재에 대해서 면세하는 물품(관세법 제101조)
•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상업용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해 주는 물품(관세법 제94조)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 관세율표 체제 상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완제품이 높고, 부분품과 원재료는 낮게 책정 되어 있으나 항공기와 반도체는 완제품이 세율이 낮고 부분품과 원재료 세율이 높으므로 제조수익으로 수입된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을 해 주어 이런 세율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해 주는 물품(관세법 제89조)
• 재수입면세 물품	• 당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 면세해 주는 물품(관세법 제99조)
•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란 재수출 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 수입 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국제상거래 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짚, 종이, 유리섬유, 대뿔땀은 제외)

자료 : 관세청(2014.7.14.)

연구지원 201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2014.7.11.)

총괄

- **[조사목적]** 가축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 및 성별 마릿수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 전국 3,068개 표본조사구와 시도별·축종별 일정 규모이상 가축사육 농가
 - ※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2014.6.1. / 2014.6.1.~6.18.
- **[2014년 2/4분기 가축사육마릿수]** 전분기대비 한·육우·육계 증가, 젓소·돼지·산란계·오리 감소

2014년 2/4분기 축종별 현황(사육마릿수)

- **[한·육우]** 287만 9천 마리, **전분기대비 2.4%↑**, 전년 동기대비 0.6%↓
 - (원인) 계절적 요인으로 송아지 생산 증가
 - ※ 한·육우 송아지 생산: ('13.6월) 291천 마리 → (12월) 108 → ('14.3월) 139 → (6월) 276
- **[젓소]** 42만 4천 마리, **전분기대비 0.9%↓**, 전년 동기대비 1.2%↓
 - (원인) 농가 자율적 수급조절 위한 생산 감소
 - ※ 젓소 송아지 생산: ('13.6월) 32천 마리 → (12월) 36 → ('14.3월) 39 → (6월) 32
- **[돼지]** 968만 마리, **전분기대비 0.2%↓**, 전년 동기대비 4.9%↓
 - (원인) 질병(PED) 발생에 따른 폐사 증가
 - ※ 폐사 마릿수: ('13.6월) 479천 마리 → (12월) 487 → ('14.3월) 560 → (6월) 578
- **[산란계]** 6,285만 1천 마리, **전분기대비 2.7%↓**, 전년 동기대비 1.5%↓
 - (원인) AI 발생으로 인한 폐사 증가 및 노계 도태로 전분기대비 감소, 전년대비 증가는 계란 산지가격호조에 따른 입식 증가
 - ※ AI 닭 살처분 현황(5.31일 현재, 농식품부): 1,003만 마리(산란계, 육계, 종계 포함)
 -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13.6월) 1,240원 → (12월) 1,436 → ('14.3월) 1,337 → (5월) 1,320

- **[육계]** 10,359만 3천 마리, **전분기대비 33.0%↑**, 전년 동기대비 8.0%↑
 - (원인) 여름철 보양식 및 월드컵 특수에 대비한 입식 증가
 - ※ 사육가구수: ('13.6월) 1,972가구 → (12월) 1,565 → ('14.3월) 1,584 → (6월) 2,035
- **[오리]** 608만 9천 마리, **전분기대비 7.4%↓**, 전년 동기대비 54.2%↓
 - (원인) AI 발생으로 종오리 부족에 따른 입식 마릿수 감소
 - ※ AI 오리 살처분 현황(5.31일 현재, 농식품부): 303만4천 마리(종오리, 육용오리 포함)
 - ※ 가구당 마릿수: ('13.6월) 13,572마리 → (12월) 12,585 → ('14.3월) 12,772 → (6월) 11,090

가축사육마릿수 총괄표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

구 분		2012	2013				2014		증 감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전분기	전년동기
소	총 마릿수	3,479	3,386	3,483	3,465	3,342	3,239	3,302	63(1.9)	-181(-5.2)
	- 한·육우	3,059	2,966	3,064	3,043	2,918	2,811	2,879	68(2.4)	-185(-6.0)
	· 한우	2,933	2,848	2,949	2,931	2,810	2,711	2,787	76(2.8)	-162(-5.5)
	· 가임암소	1,232	1,200	1,244	1,234	1,166	1,141	1,192	51(4.5)	-52(-4.2)
	- 젓 소	420	420	419	422	424	428	424	-4(-0.9)	5(1.2)
	· 가임암소	299	301	301	304	304	307	306	-1(-0.3)	5(1.7)
	사육 가구수	152,937	147,914	142,801	137,548	130,048	124,451	119,896	-4,555(-3.7)	-22,905(-16.0)
	- 한·육우	146,930	141,928	136,898	131,685	124,218	118,584	114,128	-4,456(-3.8)	-22,770(-16.6)
	· 한우	141,495	136,529	131,822	126,608	119,056	113,713	109,578	-4,135(-3.6)	-22,244(-16.9)
돼	- 젓 소	6,007	5,986	5,903	5,863	5,830	5,867	5,768	-99(-1.7)	-135(-2.3)
	총 마릿수	9,916	10,107	10,181	10,188	9,912	9,698	9,680	-18(-0.2)	-501(-4.9)
	- 모 돈	962	973	952	897	895	910	925	15(1.6)	-27(-2.8)
	지	6,040	6,130	6,067	5,918	5,636	5,441	5,315	-126(-2.3)	-752(-12.4)
	총 마릿수	146,836	139,732	167,743	136,721	151,337	151,838	176,064	24,226(16.0)	8,321(5.0)
	- 산 란 계	61,344	58,746	61,927	62,674	64,824	64,572	62,851	-1,721(-2.7)	924(1.5)
	- 육 계	76,130	71,938	95,898	64,505	76,487	77,879	103,593	25,714(33.0)	7,695(8.0)
	- 종 계	9,362	9,048	9,918	9,542	10,026	9,386	9,620	234(2.5)	-298(-3.0)
	사육 가구수	3,144	2,955	3,500	2,958	3,087	3,044	3,434	390(12.8)	-66(-1.9)
오 리	총 마릿수	11,161	11,207	13,287	12,246	10,899	6,577	6,089	-488(-7.4)	-7,198(-54.2)
	- 종 오 리	1,231	1,170	1,368	1,143	1,064	692	709	17(2.5)	-659(-48.2)
	- 육용오리	9,930	10,037	11,920	11,103	9,835	5,885	5,380	-505(-8.6)	-6,540(-54.9)
	사육 가구수	852	845	979	929	866	515	549	34(6.6)	-430(-43.9)

주: (가구당 사육마릿수, 마리) 한·육우 25.2, 젓소 73.5, 돼지 1,821, 닭 51,271, 오리 11,090

자유무역협정(FTA) 10년, 주요 과자류 수입 변화 추이

개요

- [관세청, FTA 10년 맞아 과자류* 수입동향 분석 결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수입국 다양화
※ 초콜릿, 사탕, 비스킷, 빵류(파이·케이크·와플 등), 빙과류, 껌
- [2013년 우리나라 전체 과자 수입] 2003년 대비 2.8배(1억 5,742만 달러 → 4억 3,630, 연평균 10.7%↑) 증가
※ 대(對)세계 수입 증가: 2.9배, ('03) 1,788억 달러 → ('13) 5,156
- [201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3.4배(1억 118만 달러 → 3억 4,311, 연평균 13.0%↑) 증가, 우리나라 전체 과자 수입증가율 상회*
※ FTA 비체결국 수입 증가: 1.7배, ('03) 5,624만 달러 → ('13) 9,319, 연평균 5.2%↑

수입변화

- [종류별 수입변화] (2003년) 초콜릿(전체 과자 수입의 47.7% 차지) > 사탕 > 비스킷 > 빙과류 > 껌 > 빵 순, (2013년) 초콜릿 > 사탕 > 비스킷 > 빵 > 빙과류 > 껌 순*
※ 수입비중 변화('03 → '13, %): 초콜릿(47.7 → 44.8), 사탕(23.7 → 21.7), 비스킷(18.6 → 20.0), 빵(1.8 → 8.0), 빙과류(5.2 → 5.1), 껌(3.0 → 0.3)
- [2013년 수입 과자류의 원산지 변화] 2003년 대비 미국(연평균 9.7%) 및 중국산(7.8%) 수입 증가 폭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아세안산 6.8배, 유럽연합(EU)산 3.9배로 수입 대폭 증가*하여 FTA로 인해 수입시장 다양화
※ 아세안(9.8 백만 달러 → 66.3, 연평균 21.1%↑), EU(41.3 → 162.5, 연평균 14.7%↑)
- (전체 과자 수입 중 FTA 체결국 차지하는 비중) 2003년 64.3% → 2013년 78.6%

<2013년 수입 과자류의 품목별 원산지>

- [초콜릿] (2003년) 미국 > 이탈리아 > 호주 > 벨기에 > 중국 순, 독일 및 벨기에산 수입 급증*하여 (2013년) 미국 > 이탈리아 > 벨기에 > 독일 > 중국 순
※ 수입 변화('03 → '13, 백만 달러): 벨기에(5.6 → 22.0), 독일(0.8 → 20.0)
- [사탕] (2003년) 스페인 > 중국 > 일본 순, 베트남 등 아세안산 수입 급증하고, 스페인 및 일본산 수입 감소*하여 (2013년) 중국 > 베트남 > 미국 순
※ 수입비중 변화('03 → '13, %): 중국(6.8 → 19.0), 베트남(0.5 → 18.6), 미국(5.0 → 16.0), 일본(5.3 → 4.1), 스페인(8.0 → 2.3)
- [비스킷] 2003년과 2013년 중국 > 미국 > 필리핀 순으로 순위 변화는 없으나, 중국 수입 비중 감소*, EU산 5.4배, 아세안산 4배, 미국산 3.6배 대폭 증가**
※ 수입비중 변화('03 → '13, %): EU(15.8 → 28.6), 중국(45.2 → 26.1), 미국(16.5 → 20.1), 아세안(12.5 → 16.5)
※ EU(4.6 → 25백만 달러), 아세안(3.7 → 14.5), 미국(4.8 → 17.6)
- [빵] (200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4%, 미국, EU, 아세안산 수입 대폭 증가*(연평균 29.6~53.2%)하여 (2013년) 91.3%로 대부분 차지
※ 아세안(0.1백만 달러 → 7.0), EU(0.2 → 11.2), 미국(1 → 13.5)

수출변화

- [2013년 한국 과자류 수출 2억 6천 5백만 달러, 2003년(89백만 달러) 대비 3.0배 증가
- (2003년) 2003년 일본 > 미국 > 홍콩 > 대만 > 중국 순이었으나,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세안으로의 수출 급증*
※ 수출 변화('03 → '13, 백만 달러): 중국(7.8 → 62.3), 아세안(4.2 → 28.7)
- (2013년) 중국 > 미국 > 일본 > 아세안 > 홍콩 순, 수출국 순위 크게 변화*
※ 수출비중 변화('03 → '13, %): 중국(8.8 → 23.5), 미국(17.8 → 16.1), 일본(19.8 → 12.9), 아세안(4.7 → 10.8), 홍콩(11.1 → 7.0)

201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총산출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 [2014.6월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896개, 상품 794개*, 서비스 102개 품목
※ 농림수산물 65, 광산물 8, 공산물 710, 전력·가스 및 수도 11, 서비스 102
- [2014.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포함, 전년 동월대비 0.1%↑
 - (농림수산물) 농산물은 내렸으나, 축산물 및 수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9%↑
 - (공 산 품) 화학제품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포함
 - (전력, 가스 및 수도) 전월대비 0.1%↑
 - (서 비 스) 전월대비 포함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4.3월	4월	5월	6월p	2014.3월	4월	5월	6월p
총 지 수	1000.0	0.0	-0.2	0.0	0.0	-0.5	-0.3	0.0	0.1
농림수산물	31.5	0.3	-0.2	-3.1	0.9	1.0	1.1	0.8	2.9
식량작물	6.3	-0.5	-0.4	0.4	-0.5	-5.5	-5.4	-5.3	-6.2
채소및과실	7.7	-5.6	-3.1	-8.5	-5.2	-8.0	-8.0	-3.8	-1.9
축 산 물	8.8	9.5	4.0	-1.6	7.4	15.9	16.3	14.9	16.1
수 산 물	5.0	0.1	-0.2	-4.7	3.7	-7.3	-8.7	-14.5	-5.0
공 산 품	615.4	-0.2	-0.4	0.1	0.0	-2.0	-1.9	-1.3	-1.4
석탄및석유제품	55.9	-0.2	-1.9	-0.9	-0.5	-4.1	-3.1	-2.6	-4.1
화 학 제 품	110.9	-1.0	-0.9	-1.0	0.2	-2.5	-2.3	-2.3	-2.3
제1차금속제품	108.6	-0.3	0.0	0.4	0.0	-5.5	-5.6	-4.5	-4.2
전기및전자기기	91.9	-0.3	-0.4	0.4	-0.1	-3.6	-3.9	-3.2	-3.2
전력가스수도	59.2	0.0	0.0	0.0	0.1	5.5	5.5	5.7	5.8
서 비 스	291.5	0.2	0.3	0.1	0.0	1.3	1.6	1.6	1.7
음식점및숙박	39.0	0.2	0.3	0.2	0.1	1.5	1.6	1.6	1.6
운 수	50.2	0.2	0.4	-0.1	0.0	2.0	2.4	2.3	2.1
금융 및 보험	29.5	0.1	0.8	0.0	0.0	-0.5	1.2	1.1	1.9
부 동 산	44.9	0.0	0.1	0.1	0.1	1.6	1.7	1.6	1.6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

■ 농산물 주요 등락 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식량작물	감자 -16.4, 보리쌀 -9.4, 쌀 -0.5	보리쌀 29.1 / 콩 -36.8, 쌀 -4.4
채소 및 과일	오이 20.5, 배추 18.2, 파 12.4 / 토마토 -36.5, 양파 -22.9, 수박 -21.9, 풋고추 -20.8, 참외 -19.7, 시금치 -15.6	버섯 71.9, 부추 27.7 / 양파 -54.1, 시금치 -35.2, 피망 -29.6, 배추 -25.6, 파 -25.3, 호박 -23.9, 무 -22.3
축 산 물	돼지고기 17.8, 오리고기 10.3, 달걀 5.7, 벌꿀 2.2 / 생우유 -0.5	오리고기 61.4, 돼지고기 29.1, 달걀 15.9, 쇠고기 14.4, 생우유 11.0 / 닭고기 -14.7

□ 총산출물가지수

- [의미]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 파악을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 (작성기준) 중분류(27부문) 기준 작성, 수출품의 경우 계약시점 가격을 조사하는 수출물가지수에 통관시차 반영
- [2014.6월 총산출물가지수] 전월대비 포함
 - (농림수산물) 수출가격은 내렸으나 국내출하 가격이 올라 전월대비 1.0%↑
 - (공 산 품) 수출(전기및전자기기, 수송장비) 가격이 내려 전월대비 0.1%↓

■ 총산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4.3월	4월	5월	6월p	2014.3월	4월	5월	6월p
총 지 수	1000.00	-0.1	-0.8	-0.4	0.0	-1.4	-2.1	-1.9	-2.5
국 내 출 하 수	770.67	0.0	-0.2	0.0	0.0	-0.5	-0.3	0.0	0.1
농림수산물	229.33	-0.3	-2.8	-1.7	-0.3	-4.7	-7.9	-8.3	-10.9
국 내 출 하 수	25.15	0.3	-0.2	-3.0	1.0	0.3	0.4	0.3	2.4
공 산 품	24.10	0.3	-0.2	-3.1	0.9	1.0	1.1	0.8	2.9
공 산 품	1.05	-0.9	-3.5	1.6	-2.0	-8.2	-11.7	-8.8	-13.4
국 내 출 하 수	1.82	0.8	-0.1	-0.7	-0.9	3.5	3.4	2.6	1.8
공 산 품	702.79	-0.2	-1.1	-0.5	-0.1	-2.9	-3.9	-3.6	-4.5
국 내 출 하 수	474.51	-0.2	-0.4	0.1	0.0	-2.0	-1.9	-1.3	-1.4
공 산 품	228.28	-0.3	-2.8	-1.7	-0.3	-4.7	-7.9	-8.3	-10.8
전력가스수도	45.72	0.0	0.0	0.0	0.1	5.5	5.5	5.7	5.8
서 비 스	224.52	0.2	0.3	0.1	0.0	1.3	1.6	1.6	1.7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

자료: 한국은행(2014.7.17.)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